

북한 경제개발모델의 모색

북한개발을 위한 경제모델의 모색 : 한국의 경험

배 종 렬*

- I. 문제의 제기
- II. 북한경제의 비전과 한국형 경제건설론의 경험
- III. 북한경제 개발의 전망과 그 대안
- IV. 맺음말

요 약

일부 시장지향적 개혁 및 독립채산제의 강화를 골자로 한 북한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외환부족의 해소, 산업가동률의 제고 등 북한경제의 고질적 문제의 해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①테크노크라트 주도형 경제개발체제, ②국제분업구조를 고려한 산업건설노선, ③국가적 계획체제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④대외지향적 거시경제 안정책의 강구 등 한국형 경제개발 경험의 북한경제 적용 가능성을 증진시켰다.

경제체제문제에서 파생한 경제개발의 장애,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 경제상황, 120억 달러를 상회하는 외채, 남한보다 심한 산림황폐화 등은 경제개발의 장애요소이나, 보다 넓은 시장 접근 가능성, 남한 지원의 기대, 개발준거모델의 존재, 개발독재에 대한 보다 적은 정치적 부담 등은 1960년대 남한의 상황보다 유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형 경제건설론의 벤치마킹을 통해 총력수출체제로의 경제기조 전환, 변화선도그룹의 형성, 동북아협력의 청사진 준비, 경제적 각도에서의 환경문제 인식과 환경복원을 위한 국가적 틀이 설계될 수 있다면 21세기 북한의 국가파제인 의식주와 민동산의 해결, 나아가서 공업입국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 본고는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2005.7.6~7.7) 발표자료임.

I. 문제의 제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변화는 북한경제 실태의 재조명과 함께 한국형 경제개발 경험의 북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점화하고 있다. 한국형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① 남미와 여타 개발도상국의 실패에 비교되는 한국경제개발의 성공이유를 분석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② 정부에 의한 강력한 시장개입이 개발도상국에 만연한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각도에서, ③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효율적인 체제전환의 준거모델이 될 수 있다는 측면 등을 동인으로 하여 활성화되었으나¹⁾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그 추동력이 약화된 바 있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효율적인 체제전환의 준거모델로서 한국형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은 우선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 경제 근대화시기(1960~79)의 경험, 즉 한국형 경제건설모델의 원리와 구조의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을 형성하였다.

첫째는 한국경제의 급속한 양적 성장에 대한 주목이었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되면서 이들 국가의 체제전환문제가 급부상한 것이 촉매제였다.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공산권 국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통한 급속한 경제발전 방안이었다. 한국경제가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주요 산업기반이 형성되면서 선진국형 공업입국의 초석이 정비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국가들,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다.²⁾

둘째는 중국식 경제개발모델, 즉 점진적 체제전환방식에 대한 관심증대였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적인 경제개발로 귀결되면서 ‘선경제발전, 후민주화’ 등 ‘경제발전 우선주의’가 자본주의국가인 한국에 이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었다. 더욱이 ‘중국식 경제발전의 준거모델이 ‘한국형 경제건설론’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³⁾ 한국식 경제발전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게 된다.

1) 박태균, “식민지근대화론인가, Post Modernism인가? -한국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최근 미국학계의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 제35호(2000. 3), 역사연구회(<http://www.koreanhistory.org/book/down/35-09.hwp>), pp. 1~6.

2) 박태균, 위의 글, p. 2.

3) 오원철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세계경제전문가들이 차이나쇼크라 부르는 중국경제의 대약진을 가능케 한 경제발전모델의 원조는 바로 한국입니다.”라고 밝혔다(오원철, “테크노크라트에게 권한주고 수출공업 육성해야,” 『월간조선』, 2003. 1).

그러나 한국형 경제발전모델의 북한 적용은 우선 극복해야 할 난제가 가로막고 있었다. 남북경제관계의 정상화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중국식 경제개발모델이든 아니면 한국형 경제건설모델이든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확대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한국형 경제건설모델은 북한에게 항상 중요한 고려대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개발모델들이 검토되었지만 논의의 중심은 역시 중국모델과 한국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다.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현주소는 경제의 화폐화 진전, 시장경제의 제도권 진입, 남북경제관계의 공식화, 경제특구의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북한 나름대로의 개혁·개방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경제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침체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경제개발모형은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 본 소고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해법의 탐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접근시각과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시기의 경험을 그 중심대상으로 하였

다. 동 시기는 그 경제발전의 논리가 뚜렷한 특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된 산업기반의 유지관리라는 측면보다는 새로운 산업의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북한의 경제현실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공장가동률이 불과 30%에 불과한 북한경제로서는 기존 산업시설의 정상화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개발과제는 국제경쟁력 있는 신규산업의 건설일 것이다.

둘째, 경제개발을 위한 개혁·개방의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제개발의 성공은 해당경제가 처해있는 여건에 적합하면서도 국제경쟁력 있는 경제개발의 틀을 설계하는 작업에 있을 것이다. 잘못된 경제건설노선과 잘못된 경제관리의 틀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파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사 한국경제의 좌초도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북한경제의 비전과 한국형 경제건설론의 경험

1.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에 대한 평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정책(1910~45)의

4) 양문수,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2002. 2. 26 및 정갑영, “한국적 개발전략의 북한적용 가능성 진단,” 『통일경제』, 1999년 12월호, pp. 42~55 참조.

〈표 1〉 1975년 이전까지의 남북한 1인당 GNP비교

연 도	남 한		북 한	
	1인당GNP(달러)	수출(100만 달러)	1인당GNP(달러)	수출(100만 달러)
1953	67	-	-	-
1960	83	33	280	-
1965	106	175	162	190
1970	242	1,004	740	340
1975	574	5,427	750	700

자료: 박진환, 『장마당에 밀려나고 있는 북한의 계획경제』,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2005, p. 45(통계청,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1999. 11).

여파로 ‘북은 공업, 남은 농업’이라는 경제 구조로 시작된 한반도경제는 공업화의 기반이 탄탄했던 북한의 경제력이 줄곧 남한의 경제력을 압도해 왔었다(〈표 1〉 참조).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남한경제에 뒤지기 시작한⁵⁾ 북한경제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2002년 7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북한식 개혁·개방의 기치를 높이 든 북한경제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새로운 경제 운영방침으로 제시(2002. 9)하였다.⁶⁾ 그 기조는 국방공업을 우선하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즉, 국방공업·중공업에는 국가통제하의 자원을 우선

배분하되, 경공업·농업·상업에서는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군을 경제건설에 활용하는 한편, 시장지향적 개혁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장애물의 해소에 주안점을 둔 경제건설노선으로,⁷⁾ 북한경제의 현안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99년 이후 플러스 경제성장 기조 정착도 199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군정치’의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도 다음 두 가지 북한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처방하는데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는 외환부족 해결문제이다. 북한경제의 비전이었던 자givan결형의 공업구조, 즉 선진국형 공업입국은 석유를 비롯한 각종자

5) 남한의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춘은 고 박정희 대통령 21주기 추도사에서 “1971년부터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우리는 종전의 南劣北强의 한반도경제를 南强北劣의 경제로 역전시키게 되었다.”고 말하였다(박진환, 『장마당에 밀려나고 있는 북한의 계획경제』,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2005, pp. 44~45).

6) 김영윤·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경제분석 2005-02, 통일연구원, 2005, pp. 8~10.

7) 위의 글, p. 10.

〈표 2〉 1990년 이후 북한의 무역수지와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단위: 억 달러)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무 역 액	41.7	25.8	25.6	26.5	21.0	20.5	19.8	21.8	14.4	14.8	19.7	22.7	22.6	23.9	28.6
(수 출)	(17.3)	(9.4)	(9.3)	(9.9)	(8.6)	(7.4)	(7.3)	(9.1)	(5.6)	(5.1)	(5.6)	(6.5)	(7.3)	(7.8)	(10.2)
(수 입)	(24.4)	(16.4)	(16.2)	(16.6)	(12.4)	(13.1)	(12.5)	(12.7)	(8.8)	(9.6)	(14.1)	(16.2)	(15.3)	(16.1)	(18.4)
(수출-수입)	(-7.1)	(-7.0)	(-6.9)	(-6.7)	(-3.8)	(-5.7)	(-5.2)	(-3.6)	(-3.2)	(-4.5)	(-8.5)	(-9.7)	(-8.0)	(-8.3)	(-8.2)
남북교역액	0.1	1.1	1.7	1.9	2.0	2.9	2.5	3.1	2.2	3.3	4.3	4.0	6.4	7.2	7.0
(반 입)	(0.1)	(1.0)	(1.6)	(1.8)	(1.8)	(2.2)	(1.8)	(1.9)	(0.9)	(1.2)	(1.5)	(1.8)	(2.7)	(2.9)	(2.6)
(반 출)	(-)	(-)	(0.1)	(0.1)	(0.2)	(0.6)	(0.7)	(1.2)	(1.3)	(2.1)	(2.7)	(2.3)	(3.7)	(4.3)	(4.4)
(반입-반출)	(0.1)	(1.0)	(1.5)	(1.7)	(1.6)	(1.6)	(1.1)	(0.8)	(-0.4)	(-0.9)	(-1.2)	(-0.5)	(-1.0)	(-1.5)	(-1.8)
인도지원 (국제사회)	-	-	-	-	-	2.9	1.0	3.1	3.3	4.1	3.0	4.9	3.9	3.2	4.2
(한 국)						(0.6)	(1.0)	(2.6)	(3.0)	(3.6)	(1.8)	(3.6)	(2.6)	(1.6)	(1.6)
						(2.3)	(0.0)	(0.5)	(0.3)	(0.5)	(1.1)	(1.4)	(1.3)	(1.6)	(2.6)
주요국	중 국	4.8	6.1	7.0	9.0	6.2	5.5	5.7	6.6	4.1	3.7	4.9	7.4	10.2	13.9
무역액	일 본	4.8	5.1	4.8	4.7	4.9	6.0	5.2	4.9	4.0	3.5	4.6	4.8	3.7	2.5
	러시아	22.2	3.7	3.4	2.3	1.4	0.8	0.7	0.8	0.7	0.5	0.5	0.7	1.2	2.1

자료: 통일부, KOTRA

원을 자체 생산할 수 있고 인구규모가 최소한 5,000만 명은 되어야 시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었지만,⁸⁾ 북한은 석유도 없었고 공업화가 시작되었던 1960년대 북한 인구는 1,000만 명 수준이었으며, 2004년 인구도 2,20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경제는 공업화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에 필요한 외환, 즉 수출시장과 국제지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바로 경제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경제구조였다. 1970년대 후반이후 북한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은 바로 그러한 경제구조의 산물이었다. 〈표 2〉는 1990년 이후 북한경제의 무역수지와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수출이 조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⁹⁾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여전히 북한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산업가동률 제고문제이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도 여전히 중공업과 전시형 사업에 자원배분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기조에 있어서는 1953년

8) 오원철, 『북한의 경제정책』, 기아경제연구소, 1995, p. 38.

9) 북한 무역성 림태덕 참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무역액이 침체되었으나 새 세기에 들어 서면서부터 해마다 수출액이 장성·확대되고 있다."면서 "수출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워 원자재보다는 가공품 수출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하였다(림태덕, "원자재보다 가공품에 힘을 들여", 조선신보, 2005. 4. 22).

〈표 3〉 남북한의 주요 산업별 생산현황 비교(2002년 기준)

구 분	단 위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한 국	북 한	한 국	북 한	한 국	북 한
철 강	만 톤	4,966	600.2	4,104.2	109	82.6	18.1
비철금속	만 톤	124	39.7	111.7	9.6	90.1	24.2
공작기계	만 대	36.7	3.5		0.9		26.6
농 기 계	만 대	11.1	3.2	7.3	0.8	65.8	25.3
TV수상기	만 대	2,200	26.0	1,760		80.0	
냉 장 고	만 대	460	5.0	522			
자 동 차	만 대	433	3.3	311.4	0.66	71.9	20.0
석유화학	만 톤	515	6.1	553.7	0.99		16.2
합섬원료	만 톤	596.5	1.8	566.4	0.15	94.9	8.3
합섬수지	만 톤	915.1	4.0	872.0	1.3	94.5	32.5
화학비료	만 톤	458.8	236	373	53.9	81.3	25.7
전 력	만kw/억kwh	4,845	755	2,664	194		29.2
시 멘 트	만 톤	6,227	1,202	5,126	460	82.3	38.3
판 유 리	만상자	2,393	130	2,393	47.8		36.7
조 선	만 톤	1,220	21.4	1,220	3.8		17.8
화학섬유	만 톤	304.7	17.7	264.6	2.9	86.8	16.2
직 물	만추/억m2	281	97.3	84.8	1.1		16.2
펄 프	만 톤	81.0	20.7	59.4	3.0	73.3	14.5
지 류	만 톤	1,115	25.7	930.8	4.8	83.4	18.7

주 : 1) 철강은 조강, 석유화학은 에틸렌 기준, 한국의 판유리, 조선은 생산량 기준임

2) 전력산업의 가동률은 (연평균 전력/시설용량) × 100으로 계산함.

자료 : 정봉렬, 『북한의 산업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 2003. 12, p. 20.

6·25전쟁이후 천리마대진군으로 본격화된 김일성식 경제건설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¹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이미 30%이하로 떨어진 북한공업의 가동률(〈표 3〉 참조)

이 얼마나 제고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확대되고 있는 시장지향적 개혁과 경제특구의 추가지정이 경공업, 농업, 상업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10) 2004년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05년도 국가예산보고에서 문일봉 재정상은 2004년도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6%를 국방비로 집행하고 2005년도에는 15.9%를 집행할 계획이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선군수도 평양시 건설 등 중요대상건설과 국토건설에 많은 자금을 지출하였다고 보고했다(문일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93(200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94(200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노동신문, 2005. 4. 12).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일단 플러스 성장기조가 유지되고, 곡물생산량이 소폭이나마 증가되었으며, 도소매업의 신장률이 괄목할만했던 것은 긍정적인 성과였다.¹¹⁾ 그러나 2003년도 2.3%의 성장세를 유지했던 경공업부문의 성장률이 2004년에는 전년보다 0.2% 감소하고 중화학공업의 성장률이 0.7%로 2004년도 평균성장률 2.2%를 하회함에 따라 북한 공업의 가동률 제고는 쉽지 않음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2004년 후반 세계식량계획(WFP)은 노동연령인구의 최소 30%가 불안정 고용상태거나 실업상태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종종 최저생계비 아래로 떨어지곤 한다고 밝혔다.¹²⁾ 이는 인플레이션¹³⁾은 물론 빈부격차, 부정부패의 심화 등 개혁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한국형 경제건설론의 함의

가. 테크노크라트 주도형 경제개발체제

경제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의 비전, 목표의 설정과 함께 그것을 구체화하고 관리해나가는 작업일 것이다.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할 산업은 무엇이며, 목표시장은 어디로 하고, 어떤 공장을 어떤 방식으로 건설하며, 어떻게 정부가 지원해야 하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 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질문 중의 하나는 누가 그 일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즉, 경제개발 주도세력의 형성문제이다. 한국형 경제건설론은 이 물음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의 경제상황은 한마디로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라는 표현 그대로였다. 1인당 GNP 82 달러로 농업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산업이 없어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으며, GNP의 97.1%가 소비되고 2.9%만이 국내저축으로 환류되는 구조 속에서 경제개발에 나서야 했다.¹⁴⁾ 인력만이 유일한 자원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할 수 있는 경제개발

11) 경제성장률(실질GDP기준)이 2002년 1.2%, 2003년 1.8%, 2004년 2.2%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곡물생산량은 2002년 413만톤, 2003년 425만톤, 2004년 431만톤을, 그리고 도소매업 성장률은 2003년 9.8%, 2004년 21.7%를 기록하였다(김영운·최수영, 앞의 책, pp. 40~41 및 한국은행, “200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2005-6-1호 참조).

12)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 “북한: 철권통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제위기감시기구 아시아보고서 No. 96, 2005. 4. 25(www.crisisgroup.org), p. 18에서 재인용.

13)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원화 가치가 1달러당 2.15원에서 150원으로 평가절하시 암시장 환율은 1달러당 23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암시장 시세는 계속 상승하여 2005년 3월에는 1달러당 2,400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국제위기감시기구, 위의 논문, p. 6).

14) 이형구·전승훈편, 「조세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p. 46.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었다. 여러 번의 시행 착오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그룹의 중용이 경제개발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최고통치권자에게 싹트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각성은 ‘테크노크라트’라 지칭되는 일단의 그룹들이 경제개발의 견인세력으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만들게 된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안¹⁵⁾된 이후 경제사령탑인 내각의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공업현장 테크노크라트의 의사결정권이 제약되면서 경제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비경제논리가 득세하였다. 그렇다면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에서 테크노크라트들의 지위는 강화되고 있는가?

몇 가지 주목되는 조치가 관측되었다. 첫째는 2003년에 단행된 당·정의 비생산적 인력 감축과 세대교체였다. 즉, 중앙·지방 당 일부 조직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고 유급당원의 대대적 감축(20~30%)과 함께 산업현장으로의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졌으며, 내각 경제관료들의 인력구조가 전문화·연소화하는 가운데 은행·기업 책임자로 경영마인드를 갖춘 30~40대 전문가들이 발탁된

것이였다. 이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시 국가계획의 범위가 축소되고 당비서의 역할이 정치지도로 제한되면서 기업경영의 의사결정권이 지배인으로 이양된 이후라 북한 개혁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흐름이였다. 회계법 제정(2003. 3), 추천·면접형식에서 시험방식으로 공무원 채용방식의 전환(2004. 1), 그리고 원가절감에서 순소득증대로 기업경영 최종목표의 수정(재정법 제34조: 2004. 4) 등은 이러한 개혁에 대한 법제차원에서의 뒷받침이였다.¹⁶⁾

둘째는 2004년도에 취해진 내각의 경제관리권한 강화였다. 내각을 경제개혁의 주도세력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당·군의 경제개입을 축소하는 조치였다. 당·군 등 비경제부문 기관이 운영하는 일부 사업체의 축소와 내각으로의 이관, 그리고 경제관련 조직의 일부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나 당의 경제개입이 차단되는 행정개혁이 동반되는 수준은 아니였다.¹⁷⁾

한국형 경제건설론에서 테크노크라트란 ‘시스템공법이나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한 정책수립자로 기술에 대한 소양과 경험이 있고 담당실무

15)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1년 12월 남포시 대안구역 대안전기공장 현지지도시 김일성이 지시한 공업부문 관리 방법으로서 공장·기업소에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의 구현을 강조하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등장하기 이전의 북한의 공업관리체계는 ‘지배인 유일관리제’로 지배인이 관리·운용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였다(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3. 12, p. 204).

16) 김영윤·최수영, 앞의 책, pp. 8~26 참조.

17) 김영윤·최수영, 위의 책, pp. 8~12 참조.

에 밝은 행정가'로 정의된다. 이들은 변화선도그룹으로 ① 1960년대 중반 제1차 경제 위기시의 공업구조의 개편, ② 제2차 경제 위기시의 중동진출방안, ③ 중화학공업건설, ④ 2천년대를 바라보는 국가전략의 작성 등, 국가의 주요 전략수립뿐만 아니라 그 수립된 정책의 실행정형이 피이드백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의사결정자로 기능하였다. 테크노크라트의 중용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었다.¹⁸⁾ 일본과 대만의 경제운용에서,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도 국가경제 발전전략의 수립과 실천에서 테크노크라트의 활약은 눈에 두드러지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경제에도 변화선도그룹이 형성되고 있는가? 아직도 그 평가는 유보적이지만,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북한관료들이 경제와 관련된 해외연수를 받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해외경험의 수용 및 변화에 대한 관심과 대화가 점차 활발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NGO와 학술기관에 의한 중요한 프로그램과 학술교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미미하지만 새로운 변화의 흐름은 감지된다.¹⁹⁾

나. 국제분업구조를 고려한 산업건설노선

한국의 테크노크라트들에게 주어진 1차적 과제는 경제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의 육성이었다. 즉,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화가 태부족하고 국가재정을 꾸리기도 힘든 상황이라 경제건설에 나서는 정책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외화를 벌 수 있는 산업의 육성이 최선책이었고, 그것은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수출할 수 있는 공장이나 제품이 없는 경제여건이라 산업의 선택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개방경제(Open Economy)의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야 하고, 시장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이익이 나야 했다. 경쟁력, 효율성, 경제성, 이윤, 파급효과 등이 산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외자유치와 함께 고용자원인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상황은 남한과 달랐다.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입목형(立木型: independent tree-type model) 공업화

18) 전 청와대 제2경제수석 오원철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시절(1964~80)에는 박대통령이라는 테크노크라트 밑에 경제기획원형 이코노크라트인 김학렬 부총리시대(4개월)를 제외하고는 장기영, 박충훈, 김정렴 등 상공부형 테크노크라트들이 경제총수를 맡아 한국경제건설에 매진했다”고 회고하면서 “이공계출신의 리펑(李鵬), 장쩌민(江澤民), 주룽지(朱鎔基) 후진타오(胡錦濤) 등 중국 지도부도 모두 테크노크라트”로 규정하였다(오원철, “한국의 좌표: 산업혁명과 테크노크라트,” <http://www.ceoi.org/>).

19) 국제위기감시기구, 앞의 논문, pp. 25~27.

노선²⁰⁾이라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독점이 일상화되면서 자원 및 인력과 소비형 경제구조의 고착²¹⁾과 함께 최초 의도와는 달리 합리성, 효율성, 경제성 등 경제논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를 만들어내었다.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북한경제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국가와의 무역이 강조되었다.²²⁾ 1990년대 초반부터는 UNDP의 두만강지역 개발프로그램(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과 협력해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자유치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경쟁력은 국제수준과 너무나 차이가 있었다. 7억 달러의 수출

(2002년도)에 1억 4,000만 달러의 특구에 대한 외자유치(2003년 말 누적기준)²³⁾가 전부였다. 일시적 개방에 머물렀던 북한경제에 보다 심도 있는 개혁조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제논리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저임노동력으로 국제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실천으로 이어졌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을 57.5 달러로 합의하고²⁴⁾ 남북경제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법제적 뒷받침도 가속화시켰다.²⁵⁾

향후 북한경제의 상황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일군들의 시야가 국제화되고 국제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의 건설이 가능할 것인가? 한국형 경제건설론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국제시장으로의

- 20) 입목형은 “자국의 부존자원이라는 뿌리만으로 폐쇄독립적인 경제권을 구성한다”는 뜻에서 중공업 우선원칙하에 중공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공업화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즉 수출산업에서 시작하여 중간원료, 기초원료, 중공업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피라미드형 공업화방식을 채택했다(오원철, 앞의 책, pp. 39~40).
- 21) 배종렬, “경제운용원리와 발전전략의 개혁과제,” 조명철 외 편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12, pp. 157~158.
- 22)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김일성의 무역부문 책임일군들과의 담화(1984. 2. 13)가 계기가 되었다(배종렬, 위의 글, p. 197).
- 23) Dato J. Jegathesan, CEO, JJ International Consultants, “Strategic Action Initiativ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umen Region- Involving the Private Sector,” Materials on Luncheon Briefing on the Investment Forum for the Greater Tumen Region Organized by UNDP/Tumen Secretariat·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National Pressclub, Korea Press Center, 2 June 2005, p. 11.
- 24) 무역성 김용술 부상이 조신신보와의 인터뷰(2004. 12. 13)에서 “우선 최저로임제를 30유로(11일 현재 1유로 약 139엔)로 낮추었다. 세계적인 최저로임제라 할 수 있다. 지난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미국돈 100~120달러(11일 현재 1달러 약 105엔)를 적용하고 총련동포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로 미국돈 80달러를 적용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의 최저임금은 개성공단수준보다 더 낮아지게 되었다.
- 25) 2003년 중반부터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의 하위규정들이 정비되기 시작했다(배종렬, “남북경제협약의 환경변화와 해결과제,” 『수은북한경제』, 2004 여름호, p. 66참조)..

〈표 4〉

중국의 임금상승 추세

(단위: 위안, %)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임 금 전 체 평 균	4,996	6,303	7,463	8,261	8,789	8,972	9,829	10,984	12,140	13,212	14,574
외국인투자기업 임 금 평 균	5,315	6,533	8,058	9,383	10,361	11,767	12,951	14,372	16,101	17,892	19,366
G D P 성 장 륜	13.5	12.7	10.5	9.6	8.8	7.8	7.1	8	7.5	8	9.3
소비자물가상승률	14.6	24.2	16.9	8.3	2.8	-0.8	-1.4	0.3	0.5	-0.8	1.2

자료 : 중국통계연감 각년도

진출은 최고통치권자의 고독한 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²⁶⁾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 동참을 필요로 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수출주도형 공업화 노선, 그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당시 신흥개발국의 경제개발 시각은 내수 중심의 개발이었고 인도, 파키스탄 등이 그러한 전략을 채택했었다. 이것은 후진국개발이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제국주의론 등의 여파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다. 미국 다국적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강화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종속이론 등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미국 등 서방의 다국적기업들은 새로운 생산거점을 찾았고, 그것은 점차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수출에 활력을 부여하였다.

한국형 경제건설론의 경험은 결단과 함께 기회의 포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북

한경제의 국제시장 참여는 시장경제의 확대와 함께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는 문제라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우선 중국 산 경공업 제품의 경쟁력 약화조짐이다. 주지하다시피 경공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은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의 아시아 4인방이 주도하다가 한국형 경제개발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벤치마킹이 늘어나면서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를 거쳐 구사회주의국가였던 중국·베트남으로 이전되었었다. 그런데 중국경제의 급속한 공업화는 중국 경공업 국제경쟁력의 원천인 노임, 전력비 등 생산비용의 상승(〈표 4〉 참조)을 초래해 북한경제의 국제시장 참여에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위안화의 평가절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동태적 CGE(Computable General

26) 박정희 대통령이 외자유치를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당시로는 획기적인 민간기업의 빚에 대한 국가보증제를 도입했던 것은 이에 대한 일례였다.

Equilibrium) 모형분석을 통해 북한 산업 개발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국내의 한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²⁷⁾ 북한 산업구조의 특성상 도입외자의 산업별 투자 배분 비중은 서비스업 > 농림·수산·광업 > 중공업 > 경공업 순으로 배분되지만 외자 도입을 통한 투자의 산업별 파급효과는 경공업 > 농림·수산·광업 > 중공업 >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경공업과 농림·수산·광업의 총산출 증대효과가 중공업과 서비스산업에 비해 월등함이 입증된 것이었다. 이는 향후 북한으로 도입된 외자가 투자자본이 되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됐을 때 북한산업의 총산출 증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은 경공업 분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CGE 모형 분석 결과는 북한경제가 그간 추진해온 중공업부문의 개발우선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며, 현재 남북한간에 추진되고 있는 경공업과 농수산물 중심의 남북경제협력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교류협력방안임을 시사한 것이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요인은 개성공단 진출에 대한 남한 중소기업들의 높은 수요이다. 개성공단 착공식(2003. 6. 30) 후 김영수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성공단 현지방문(2003.

8. 25)시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여 개성공단의 조기입주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며, 현대아산에 입주희망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도 1,222개사(2003. 9. 24)에 이르렀다. 그리고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3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3. 11. 21~28)에서 응답자의 83.1%가 개성공단의 조기 완공시 해외이전을 포기하고 개성공단으로 입주할 의사를 표명하였다.²⁸⁾ 또한 1단계 시범사업에는 15개 공장선정에 230개 이상의 기업이 지원해 1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적어도 1,800여개사의 한국기업이 개성공단에 관심을 표명해 공단의 확장여력도 큰 편이다.²⁹⁾

다. 국가적 계획체제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한국경제 건설경험에서 또 하나 테크노크라트들을 괴롭힌 것은 상품의 질적 제고와 다양화, 즉 정태적 비교우위가 아니라 동태적 비교우위의 확보였다. 다시 말해 산업건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며,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품을 계속 개발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두 가지 제약요소를 해결해야 했다.

하나는 국제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국내

27) 정봉렬, 「북한의 산업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 2003, pp. 66~67.

28) 배종렬(2004), "앞의 글, p. 69.

29) 국제위기감시기구,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p. 15.

〈표 5〉 공업화 발전단계와 정책

공 업 화 계	자립발전			국제무대진출	
	직접보호단계	중점지수단계	자립발전단계	완전국제경쟁	세계일류화
정 책	정 부 계 획 정 부 보 조	정 부 계 획 국내판매보호 수 출 지 수	민 간 주 도 국 제 규 모		
공 업 단 계	후진공업국 >			선진공업국	
경제발전방식	경제건설 >			경제운용	
이 론 (예 식)	어머니역할론 > (국교) (중학교) (고교)			자유경제론 (대학) (사회)	
경 제 정 책	MICRO >			MACRO	
	개별공업정책 >			통계적 관리	
주 도 형	정부주도 >			민간주도	

자료 : 오원철, 북한의 식량문제 고찰, 1995, 기아경제연구소, p. 28.

경제의 보호였다. 시장의 움직임이 항상 예상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고유가, 금리 및 환율변동, 원료공급의 증지, 가격인상, 수입제한, 자원난 등 술한 난제가 몰려들었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기에 수출, 물가, 공장건설, 물자수급 등 여러 분야에서 의 긴급대책이 요구되었다.

다른 하나는 산업구조 고도화과정에서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였다. 국제분업구조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도 대부분의 산업건설에 있어서 낙관적 전망보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였다. 산업건설에 나서야 할 기업도, 대한투자에 나서야 할 외국투자자도, 자문에 응한 국내외

전문가 그룹도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었다. 석유화학공업, 제철공업 등 주요산업의 건설과정이 그러하였다.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의 공유와 함께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개척자적인 기업가정신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가경제를 관리하는 틀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리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경제건설이 불가능했다. “한국은 공업 기반이 없는 상태이지만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 즉 피라미드(The Construction of Pyramid Type Export Oriented Industries)를 정부 주도하에 새로 구축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천명과 함께 경제건설의 사령탑이 필요했다. 대통령 스스로

가 테크노크라트가 되어 경제건설을 진두지휘하면서 한국형 경제건설론의 주요 골격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했다. <표 5>는 이와 같은 한국형 경제건설론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미시(Micro), 거시(Macro)정책의 공존 속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제건설운용시스템의 구축이었다. 미시정책의 핵심은 개별공업정책에 근거한 경제건설이었고, 거시정책의 핵심은 통계적 관리로 경제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자는 상공부가, 후자는 경제기획원이 책임을 졌다. 조정은 부총리와 청와대가 담당하였다. 매월 개최되는 무역확대회의, 월간경제동향보고, 분기별 심사분석, 매년 초에 있는 초도순시 등 최고통치권자의 진두지휘는 이러한 시스템에 활력을 부여하였다.

둘째는 공업의 단계적 육성책의 마련이었다. 공업육성의 우선순위는 해당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골랐다. 공업의 육성은 직접보호단계, 중점지원단계, 자립발전단계, 완전국제경쟁단계, 세계일류화의 5단계로 나누어 초기 유치산업은 관민협조체제로, 이미 국제경쟁력이 생긴 산업은 민간주도로 하였다.

셋째는 국가계획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였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그 계획의 실천은 국민의 협조와 투자에 나서는 기업가의 몫이었다. 경제건설의 근간이 시장경제인 상태라 투자동기의 유발과 국제경쟁력의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했다. 경제건설의 성공은 민간의 동참과 함께 기업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도입되었다. 국제규모화와 공업단지식 개발, 공기단축작전, 평가절하를 통한 저노임 유지, 기업에 대한 국가보증제도 도입, 각종 투자수출유인책 강구, 무역확대회의와 수출유공자 포상, 기술자 및 기능공의 양성, 새마을운동의 실시와 그린벨트 지정 등이 바로 그러한 대안들의 하나였다.

그렇다면 북한경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국가계획에 의한 공업입국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한은 공업입국의 성공에 의해 국가계획의 필요성이 사라진 반면, 북한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채택한 완충기 경제계획(1994~96) 이후 새로운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은 발표되지 못했다.³⁰⁾ 계획경제시스템이 마미된 것이었다.

30) 1998년 경제과업 관철을 위한 내각결정이 채택된 이후 연료·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 계획(2003~2005),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1차: 1998~2002, 2차: 2003~2007), 평양시 현대화계획(2002~2004) 등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부문별 경제계획만 운영되고 있다(통일부, 2004 북한개요, pp. 235~236).

무엇이 문제였던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문제였다. 효율성에 기초한 집중과 선택의 원리가 관철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은 있는가?

첫째는 계획의 현실성 증대였다. 2002년 중앙계획대상을 중요지표로 축소하고 세부 계획권한을 지방과 기업에 위임한 이후, 2004년에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전략지표·중요지표만 현물계획으로 하달하고 나머지는 금액계획으로 하달해 기업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었다.³¹⁾

둘째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였다. 주지하다시피 김일성 주석 사망(1994) 이후 북한 경제는 5년간 예·결산안을 발표하지 못했다. 경제현실에 맞는 예산수립³²⁾으로부터 시작된 재정의 건전성 제고노력은 ① 각종 보조금 폐지, 예산제기관 축소 및 지방예산 제 강화(2002) 등 재정지출을 줄이고, ② 토지사용료 신설 등 재정수입항목 신설(2002), 인민생활공채 발행(2003), 그리고 지출위주로부터 수입위주로 재정관리체계의 전환(2004)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③ 집금소의 설치(2003), 회계·검증제도의 마련을 통한 화폐계산체계의 확립(2004)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증

진시키는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직·기구의 문제였다. 북한경제의 자원배분시스템의 특징은 노동당, 국가계획위원회 등 계획의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매크로적 기능은 있으나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개별공업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마이크로적 기능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었다. 내각이 정책결정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공업담당부서가 전기·석탄공업성, 채취공업성, 금속기계공업성, 전자공업성, 건설건설공업성, 화학공업성, 경공업성 등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시스템하에서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중장기적 시야보다는 당면현안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라. 대외지향적 거시경제 안정책의 강구

한국형 경제개발모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방식이었다. 경제건설에 나섰던 한국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국제적 파고로부터 한국경제를 지킬 수 있는 거시경제 안정책의 강구였다. 거시경제의 안정은 일반적으로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조화와 함께 정책의 타임성이 결정적이다. 내수주도형과 달리 수출주도형 경제의 취약점은 국제시장의 영향

31) 김영윤·최수영, 앞의 책, p. 25.

32) 1999년도 예산수입은 1994년 예산수입총액 416억 2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8억 103만원 수준이었으며, 2004년도 예산수입은 더욱 줄어 112억 6,100만원 수준을 기록하였다(통일부, 2004 북한개요, p. 251 및 로동신문, 2005년 4월 12일자).

이 바로 국내경제로 파급된다는 것이며, 경제관리에 실패할 경우 바로 경제위기로 치닫는다는 점이었다.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한국경제는 3번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첫번째는 1963~64년의 외화고갈에 따른 위기였고, 두번째는 1973년 석유파동에 따른 위기였으며, 세번째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촉발된 IMF사태였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3번의 경제위기는 모두 외화고갈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된다.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경제는 식료품을 위시해서 에너지, 천연원료, 기본소재, 중간부품과 완제품, 기술 등 모든 것을 수입으로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수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바로 경제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경제구조였다. 그러나 장점도 있었다. 수출입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면 거시경제 안정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거시경제 안정책은 경제구조의 특성상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다. 달러부족에서 시작된 제1차 경제위기는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오일파동으로 시작된 제2차 경제위기는 중동진출전략으로 타개책을 강구했다.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병행되었다. 수입대체산업의 육

성, 외화소비절약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거시정책의 사령탑인 경제기획원은 타이밍 맞는 경제관리정책의 수립에, 미시정책의 사령탑인 상공부 등 관련부처는 적극적인 돌파구 마련에, 그리고 청와대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거시경제안정책을 강구하였다.

외환의 확보가 중요했던 것은 북한경제도 마찬가지였다. 즉, 1970년대 오일파동 속에서 인민경제 6개년계획(1971~76)이 중단(1975. 8)되면서부터 외환은 북한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해결책은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거나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 이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북한도 대외지향적 거시경제 안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에도, 그리고 1990년대 초반 소동구권의 붕괴로 인해 사회주의시장³³⁾을 상실할 때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했고, 그 귀결은 북한경제의 파탄이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은 있는가? <표 2>에서 보듯이 1995년 이후 3~4억 달러대에 이르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뚜렷한 조짐을 찾기 어려웠다. 다만,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1998년을 기점으로 국제수지적자의 확대 속에서

33) 1980년대 말까지 북한의 거래상대는 주로 사회주의나라로 전체무역량의 약 70%를 차지하였다(조신신보, 2002. 12. 13).

〈표 6〉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 동향

(단위: 억 달러)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성장률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1.3	3.7	1.2	1.8	2.2
수출-수입	-7.1	-7.0	-6.9	-6.7	-3.8	-5.7	-5.2	-3.6	-3.2	-4.5	-8.5	-9.7	-8.0	-8.3	-8.2
반입-반출	0.1	1.0	1.5	1.7	1.6	1.6	1.1	0.8	-0.4	-0.9	-1.2	-0.5	-1.0	-1.5	-1.8

자료: 한국은행, KOTRA, 통일부.

도 북한경제의 플러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이었다(〈표 6〉 참조). 북한이 나름대로 거시경제 안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징표였다. 그러나 거시경제지표의 일시적 안정에 대해 여러 분석가들은 내부 경제개혁이 충분하지 못한 채 중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⁴⁾

Ⅲ. 북한경제 개발의 전망과 그 대안

1. 북한의 경제개발 전망

한국형 경제건설론에 비추어볼 때 북한의 경제개발 전망은 남한이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의 상황보다 여러 면에서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의 현 상황은 외화고갈과 낮은 산업가동률, 그리고 산림황폐화, 즉 민둥산으로 요약된다. 1960년대 남한의 경제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물론 경제체제문제에서 파생된 경제개발의 장애, 빈곤의 악순환이 아니라 빈곤의 함정³⁵⁾에 빠진 경제상황, 120억 달러를 상회하는 외채,³⁶⁾ 남한보다 심한 산림황폐화 등 1960년대 남한의 상황보다 불리한 경제여건이 관측된다. 그렇지만 금

34) 북한의 거시경제 안정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컸다는 의견은 “중국의 대북 지원량의 추정에서 가장 적합한 수치는 양국간의 무역적자액이다.”는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의 추정, “중국은 1994년 이후 대략 매년 쌀·밀 100만 톤과 중유 50만 톤을 지원했는데 이는 북한 원료수입의 70~90%, 식량 수입의 1/3에 해당한다”는 데이비드 샴바우(David Shambaugh)의 주장, 그리고 “중국의 지원 외에도 1990년대 중반부터 남한(원조 10억 달러 이상), 일본(식량 100만톤 이상), 미국(원조 10억 달러 이상) 등의 지원이 있었고, 한국의 통일부는 1995년부터 일본, 한국, EU, UN을 통해 약 24억 달러 상당의 식량, 비료, 의약품, 중유 등을 북한에 지원하였다고 밝혔다”는 빅터 차(Victor Cha)의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 등에 나타나 있다(배종렬, “김정일의 북한경제 10년: 무엇이 달라졌으며, 어떻게 바뀔 것인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2004북한경제 심포지엄(2004. 7. 7) 발표논문집, 통일연구원, 2004, p. 29).

35) 빈곤의 함정은 저개발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하다가 외부충격으로 인해 생산이 급속하게 축소되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윤덕룡·박순,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투자 방향의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2, pp. 10~11).

36) 2001년부터 한국은행은 북한 외채추정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2000년도의 추정치는 124.6억 달러이다.

정적인 요소도 보인다.

첫째는 시장접근의 차이이다. 1960년대 남한경제는 사회주의시장에 대한 접근이 차단당한 상태에서 자본주의시장만을 대상으로만 공업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은 공업화에 나설 경우 과거 사회주의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시장 모두를 그 대상시장으로 삼을 수 있다.

둘째는 공업화 지원세력의 차이이다. 남한이 경제개발에 나섰던 1960~70년대의 상황은 남북한 대결이라는 제약요소에서 독자적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했다. 반면, 북한은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공업입국에 성공한 남한의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건설에 나설 수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홍콩, 대만의 기여도를 보면 자명해진다.

셋째는 준거모델의 차이이다. 남한은 경제개발을 추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의 하나는 경제건설의 구체적 벤치마킹대상의 부족이었다.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면서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묻는 외국학자의 질문에 대해 전 청와대 제2경제수석을 역임했던 오원철씨는 “새로운 집을 신축하듯이 했소. 그리고 공학적 접근법(Engineering Approach to Economic Construction)을 썼소.” 라

고 답하면서 경제발전이 아니라 ‘경제건설(Economic Construction)’을 했다고 누누이 설명한 것은 이에 대한 일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경제개발 경험과 그것을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 적용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어 경제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폐해를 줄일 수 있다.

넷째는 자연적 조건의 차이이다. 남한이 산업혁명에 임했던 1960년대의 상황은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격인 농민(1964년 총인구의 약 56% 수준)에 농민 1인당 경지면적은 423평(1,396평방미터)으로 지극히 영세해 주변국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약하였다. 북한의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북한의 농업인구는 약 850만 명(전인구의 35~40% 수준) 정도로 추정되며 경지면적은 남한과 비슷한 200만 정보³⁷⁾에 달해 남북인구수를 감안할 때 잠재적 경쟁력은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

다섯째는 정치적 부담의 차이이다. 경제외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한국형 경제건설론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발독재라 할 수 있다. 군대나 독재정당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기하고 경제건설에 나서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에서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된 특성이었다. 즉, 권위주의형 지도자의 등장

37) 약 3:7의 비율로 남한은 논(130만 정보)이 많고, 북한은 밭(136만 정보)이 많다.

이었다. 그렇지만 개발독재는 다른 측면에서 많은 대가를 요구했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때로는 무리수를 두어야 했다.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의 현 여건은 남한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개발을 함에 있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치적 안정을 꾀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2. 북한의 경제개발 방향

앞에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현재 북한경제 상황을 타개하기는 역부족이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변화는 과거에 비해서 한국형 경제건설론의 적용가능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 테크노크라트 주도형 경제개발체제, 국제분업구조를 고려한 산업건설노선, 국가적 계획체제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대외지향적 거시경제 안정책의 강구 등 한국형 경제건설론의 주요 구성요소들은 북한 경제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가. 총력수출체제로의 전환

1970년대 후반 북한경제가 대외적으로

파산한 이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 것은 수출의 확대였다. 제2차 7개년계획(1978~84)에서 ‘대외무역의 발전’이라는 정책목표가, 1990년대 중반에는 ‘무역제일주의’의 구현을 위해 나진선봉 개발로,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개성특구와 북한판 홍콩인 신의주의 개발로 진일보하고 있지만 2004년도 북한의 수출은 약 10억 달러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북한산 제품, 공장의 수출경쟁력이 없다는 말이다. 이는 북한 경제건설노선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경제건설노선의 기조가 ‘수출제일주의’ 또는 ‘수출공업의 육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은 국방공업을 우선하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기조로서는 북한경제의 회생은 어렵다. 국제사회가 인지할 수 있고 내부자원의 가동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동신문의 신년사설 등의 형태로 천명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계량적 지표로 연간 목표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최고통치권자의 확고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한의 공업입국 성공에는 ‘전산업의 수출화³⁸⁾’라는 기본명제가 국가의 통치철학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38) 중화학공업과 국민의 과학화선언(1973. 1. 14)이후 수출제일주의, 공업입국, 과학화, 중화학공업 육성이라는 4가지 기본방침이 형성되면서 그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1973년 2월 12일 중화학공업단에 하사한 휘호이다.

데서부터 비롯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문제를 직접 챙기는 최고통치권자의 집념이 중요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 확대회의가 1966년에 시작되어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까지 열렸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³⁹⁾

셋째, 수출할 수 있는 공장의 건설 및 외자기업의 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경제가 악화된 근본원인 중의 하나는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장의 건설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산공법이나 기술수준, 생산비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었다.⁴⁰⁾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은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IT분야, 상대적 비교우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공업·농업분야, 그리고 경제특구의 건설에 있어서 역점을 두어야 할 포인트이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재건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공장’의 건설이 제1목표가 되어야 한다.

나. 변화선도그룹의 형성

수출주도형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그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의 능력이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평가는 아직 유보적이다. 즉, 시장경제와 국제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⁴¹⁾ 사회주의 계획경제 50년간 누적된 폐단을 바로잡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30년의 경험을 가진 중국은 눈부신 성공을, 사회주의 70년의 경험을 가진 러시아도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 현실은 북한경제의 미래를 대변하고 있다.

첫째, 경제개발을 담당할 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은 공업입국과정에서 개별공업정책을 담당하는 테크노크라트, 경제관리운용을 담당하는 이코노크라트, 그리고 현장경제건설요원인 기능인력 등 산업전사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특히 기능인력 양성교육은 1967년 1월 직업훈련법의 제정과 공업고등학교의 설립⁴²⁾으로 가속화되었다.

둘째, 능력있는 테크노크라트를 전진배치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최근 테크노크

39) 이와 함께 약 50여명에 이르는 국무위원과 국회 분과위원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의도 열렸는데, 여기서는 물가동향, 국제수지동향, 정부예산의 집행, 정부투자자사업의 진행 등 국민경제의 현황이 보고되었고 1971년 6월부터는 농민성공사례도 발표되었다(박진환, 앞의 책, pp. 49~50).

40) 북한 주요산업의 기술수준은 남한과 대비할 때 10~35년 뒤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낙후된 분야는 자동차, 전력, 조선, 화학섬유, 방직, 제지산업으로 한국의 1960년대 후반 기술수준이었다(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00).

41) 국제위기감시기구, 앞의 논문, p. 19~21.

42) 정부는 1977년까지 금오공업고등학교 등 11개교를 설립하였고, 국영기업 및 민간 대기업체에도 학교설립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금오공업고등학교의 설립에는 일본의 원조(356만달러: 1971~76)가 큰 기여를 하였다.

라트들의 지위가 상승되고는 있으나, 아직 전문관료보다는 당관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내각출신이든 당출신이든 상관없이 능력있는 테크노크라트들을 내각에 전진배치하고 그들이 경제사령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전사의 육성창구로서 경제특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교육, 해외연수 등을 통해 경제관료, 학자들의 시야를 국제화하는 것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장인력의 국제경쟁력이다. 경제특구는 산학협동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다. 동북아협력의 청사진 준비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RADP)과 협력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나진선봉지역개발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충분치 못한 개혁·개방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는 획득하지 못했다. 또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연이어 단행된 신의주 특별행정구 발표도 그 개혁·개방폭이 사전예상을 뛰어넘어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으나 북·중간의 불협화음으로 특별행정구의 건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표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특히 신의주 개발은 경제특구로 지

정된 금강산, 개성과는 달리 특별행정구로 북한판 홍콩의 건설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적지 않다.

첫째, 신의주 특별행정구 건설은 재개되어야 한다. 나진선봉의 실패 이후 북한에 대한 의구심의 하나는 개혁·개방의 지속성과 경쟁력이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그럴 의지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성과 금강산의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국제간 공동개발이 가능한 신의주, 나진선봉 등이 보다 적격지일 것이다.

둘째, 핵문제해법의 일환으로 신의주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의 해법이 강구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 문제가 현안이슈로 부상될 것이다.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신의주만한 적격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중국시장으로의 진출, 대만·홍콩·유럽자본의 유치능력 등 여러 면에서 나진선봉지역보다 우위에 있으며, 홍콩과 같은 법제가 정비될 경우 수출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 경제협력에의 적극적 참여이다. 북·중·러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TRADP 사업, 동북아지역 개발금융기구 설립논의, 동북아 에너지연계망 구축, TSR-TKR연결 등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

러 구상들이 모두 북한지역과 관련되어 있다. 북한의 전향적 입장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대에 순기능적인 역할이 예상된다.

라.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

북한의 지속적 경제난은 민둥산, 즉 삼림 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경제개발을 제약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농업생산력의 저하, 발전량의 감소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과거 경제개발시기와는 사뭇 다르다. 쓰나미, 북극 빙하의 해빙, 오존층의 파괴, 이상기후의 등장 등 여러 환경이슈가 국제사회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경제개발과 환경복원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현실이며 경제개발의 과제인 것이다.

첫째, 환경프로그램의 조기가동이다. 후발성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경제개발의 초기부터 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제개발을 담당하는 엘리트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재는 사전예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동방명주탑(東方明珠塔)으로 유명한 중국 상해시의 실패⁴³⁾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적 틀의 설계이다. 국토의 활용에 있어서 개발과 개발금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과거 남한의 산야도 민둥산 그 자체였다. 가난이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개발과 동시에 환경의 복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에 의해 도입된 그린벨트정책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환경의 복원에는 획기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셋째, 환경문제는 경제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민둥산으로 설명되는 과거 한국의 환경문제는 땀감의 부족이, 그리고 에너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외화의 부족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대체연료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에너지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외화가 충분해지면 푸른 산야를 갖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한국의 경제건설경험이었다. 총력수출체제는 국민의 의식주 해결뿐만 아니라 환경의 복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제건설노선인 것이다.

IV. 맺음말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아시아국가들의 경제개발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넘어 아시아 마지막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으

43) 상해시의 경우 고층건물의 밀집과 과도한 지하수개발로 지반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포동지구가 심해 고층빌딩 건축허가기준 강화, 지하수 채취의 절감 등 상해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신화통신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이 초기 상해특구 건설에 반영되었어야 했다(길림신문, 2005. 4. 4).

로 밀려오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시작된 북한의 개혁·개방은 점차 북한경제의 국제화, 개방화를 전제로 한 국가경제발전전략의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1997년 김정일체제가 공식 등장한 이후 북한은 북한의 현실에 적합한 경제개발모델을 찾기 위해 유럽식 경제모델, 아시아의 경제모델, 중국의 경제모델 등 다양한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경제, 사회, 정치, 역사, 문화적 토대 등 경제개발의 기초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북한경제로의 직접적 이식은 쉽지 않다. 자유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경제로 경제개발에 나서자니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이 없다. 또한 선진국경제와 같이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것도 아니다. 개방경제로 갈 경우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토착기업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공업화에 나설 수도 없다. 북한경제 50년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국민의 의식주 해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원리와 계획원리를 배합하면서도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국내 시장에서는 독점체제를, 수출시장에서는 경

쟁체제를 도입해 독점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의 육성에 성공한 한국형 경제건설론은 ①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은 어떻게 형성하며, ② 무슨 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산업구조를 고도화해가며, ③ 국제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국내경제를 어떻게 보호하며, ④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배분의 원리는 무엇인가 등 북한의 여러 고민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의식주와 민동산의 해결, 그것은 1960년대 한국이 직면한 국가과업이었다. 총력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국가비전하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해 가는 방안을 정부와 기업과 민간이 합심하여 찾아갔다. 의식주와 민동산은 40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북한의 국가과제로 부상하였다. 1960년대 한국의 경제상황에 비해 나쁘지 않은 조건을 갖춘 북한이 극복하지 못할 과업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상황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해법을 먼 곳에서 찾고 있는 점이 아닐까?

〈참고문헌〉

- 김영윤·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정세분석 2005-02, 통일연구원, 2005.
- 박진환, 『장마당에 밀려나고 있는 북한의 계획경제』,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2005.
- 박태균, “식민지근대화론인가, Post Modernism인가? -한국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최근 미국학계의 연구 동향-”, 『역사와 현실』, 제35호(2000. 3), 역사연구회(<http://www.koreanhistory.org/book/down/35-09.hwp>).
- 배종렬, “경제운용원리와 발전전략의 개혁과제,” 조명철 외 편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 사회의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12, pp. 155~167.
- _____,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해결과제,” 『수은북한경제』, 2004 여름호, p. 53~80.
- _____, “김정일의 북한경제 10년: 무엇이 달라졌으며, 어떻게 바뀔 것인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2004북한경제 심포지엄(2004. 7. 7) 발표논문집, 통일연구원, 2004, pp. 5~32.
- 양문수,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2002. 2. 26.
- 오원철, 『북한의 경제정책』, 기아경제연구소, 1995.
- _____, 북한의 식량문제 고찰, 기아경제연구소, 1995.
- _____, “테크노크라트에겐 권한주고 수출공업 육성해야,” 월간조선, 2003. 1.
- _____, “한국의 좌표: 산업혁명과 테크노크라트,” <http://www.ceoi.org/>(검색일 2005. 6).
- 윤덕룡·박순,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투자 방향의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2.
- 이형구·전승훈편, 『조세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 정갑영, “한국적 개발전략의 북한적용 가능성 진단,” 『통일경제』, 1999년 12월호, pp. 42~55.
- 정봉렬, 『북한의 산업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 2003. 12.
-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3. 12.
- _____,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각호.
-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00.
- 한국은행, “200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2005-6-1호.
- 림태덕, “원자재보다 가공품에 힘을 들여,” 조선신보, 2005. 4. 22.

문일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93(200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94(200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로동신문, 2005. 4. 12.

로동신문, 2005. 4. 12.

조선신보, 2002. 12. 13.

_____, 2004. 12. 13.

길림신문, 2005. 4. 4.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북한: 철권통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제위기감시기구 아시아보고서 No. 96, 2005. 4. 25(www.crisisgroup.org).

Dato J. Jegathesan, CEO, JJ International Consultants, “Strategic Action Initiativ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umen Region-Involving the Private Sector,” Materials on Luncheon Briefing on the Investment Forum for the Greater Tumen Region Organized by UNDP/Tumen Secretariat·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National Pressclub, Korea Press Center, 2 June 2005.